

종합

인사청문 첫 날...이재훈 5억 자문료·박재완 논문 이증계재 도마에

野 “자진사퇴 촉구” 與 “직무수행 충분” 격돌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재산 증식 과정과 위장 전입 등 도덕성 및 정책 능력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재산 증식 과정이 논란이 됐다. 이 내정자 부인의 서울 창신동 ‘죽방촌’ 투기 의혹을 비롯한 상가 보유, 이 내정자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15개월간 김연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5억원 가량의 자문료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것.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이 내정자는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에 역행한다”며 “죽방촌 투기는 물론, 김연장 법률사무소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점도 답답해 아닌 뇌물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부인의 죽방촌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내정자의 해명대로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 ‘노후 대비용’이었다면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내정자의 해명대로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 ‘노후 대비용’이었다면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이 내정자의 경력을 볼 때 이명박 정부가 지지하는 친서민 정책을 충분히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며 “특히 다양한 재산증식 방법 중 하나를 장관 직무수행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언론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한나라당은 주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청년실업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할 반면 야당은 박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경력 부족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내정자가 비록 노동에 관한 경험은 부족하지만 행정, 정부 등 전체 경력에 비춰볼 때 고용부를 이끌 경력은 충분하다”며 타임오프제와 사내하청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2005년 재산변동사항과 공개된 부동산, 차량, 유가증권 등의 재산내역과 2006년과 2007년의 자동차 가액



국회는 20일부터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20일 오전 국회 지경위 인사청문회 모습. /연합뉴스

이 빠져 있다”며 “또 2009년 재산변동내역을 보면 주식과 회원권 매도로 현금성 자산이 1억9412만원 증가해야 하지만 증가한 금액은 9000만원에 불과한데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남아 사유가 됐다”며 “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는데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한편, 박 내정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됐다.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것은 불찰”이라며 “자녀교육이나 탈세, 금융 소득공제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시 SSM 입점 규제 조례 만든다

(기업형슈퍼마켓)

강운태 시장 시민과 대화서 밝혀

광주시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시민과 대화’에서 북구 삼각동 인근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건축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는 있지만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는 처음이어서 구체적 추진 여

부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북구 삼각동에 입점하려는 대형마트를 대기업이 운영한다고 하면 광주중소기업청장에게 조정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관할 북구청은 광주중소기업청장에 조정신청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북구청은 삼각동 1-5번지의 12필지에 대형마트 건축 불허가를 했지만, 해당 업체가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북구청이 1심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한편, 북구 삼각동 인근 상인들은 “모 대기업이 남광주시장과 광주시청 앞 등에 각각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입점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 ‘빅3’ 당권경쟁 정면대결

전국 투어 돌입...계파간 힘겨투기 예고

민주당의 10월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별 대의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출대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정세균,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 등 이른바 ‘빅3’의 정면대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인이 그동안의 물밑 탐색전에서 벗어나 내주부터 전국 투어를 돌입, 당권 행보를 가속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 대표직 사퇴 이후 정중동 행보를 보였던 정 전 대표는 오는 22일 ‘당원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는 것으로 당권 도전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2년간의 춘천 집거를 접고 정계에 복귀한 손 전 대표는 19일 노사분규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리던 구미의 한 반도체업체를 찾은 것으로 외부행보를 시작했다. ‘국민생활 중심 정당’, ‘실천 있는 진보’를 복귀 일선으로 제시한 그는 내주부터 지역별 대의원 대회에 참석, 바닥조직 추스르기에 나선다.

‘담대한 진보’를 내세워 노선대결에 불을 지펴온 정 고문은 주말인 21~22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전주를 찾는데 이어 오는 26일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담대한 진보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등 건통적 지지층 공략에 나선다. 첫 당권 도전 행보를 호남에서 함으로써 그동안 뒤쳐진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의도서 ‘청년 김대중 캠프’

오늘·내일 이틀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에서 ‘청년 김대중 캠프’가 열린다.

‘사건법인 행동하는 양심’ 주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21일부터 이틀간 ‘하의도 섬 소년 김대중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의 생애와 정신을 배우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지난 3월 청담대회와 함께 출범한 행동하는 양심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하며 생가 참배를 시작으로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특강, 주민 위안잔치 등이 열린다.

또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광주 북구 민주당 당원 90여 명은 이날 하의도 생가 참배에 이어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고향 방문길에 들려왔던 덕봉강당, 하의도 큰 바위 얼굴 등을 둘러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도당위원장 내달 11~17일 선출

민주당은 내달 11~17일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광주시당은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어 시당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11일 시당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남도당도 오는 30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도당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내달 14~17일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시당 위원장은 김재균(복음) 의

원과 강기정(복합) 의원이 출마 뜻을 밝혀 경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합의 추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합의 추대를 하려면 김재균 의원과 강기정 의원 두명 중 한 명이 출마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합의 추대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전남도당 위원장은 이낙연(함평·영광·장성) 의원의 추대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에 경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경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방북 한상렬 목사 귀환... 판문점서 체포

국보법 위반 영장 신청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방북 70일 만인 20일 오후 3시께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하얀 두루마기에 한반도기를 들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한 목사는 곧바로 경찰 등 관계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판문점 북측 지역 판문각 앞에는 북한측 인사 200여명이 도열해 ‘조국통일’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목사를 서울 흥재동

보안분실로 연행해 검찰,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합동조사한 뒤 48시간 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안당국은 한 목사가 지난 6월 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해 북한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설

광주문화재단 출범 전문·자율성 선행돼야

광주지역 문화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싱크탱크’ 역할을 할 (재)광주문화예술재단(이하 문화재단)이 내년 1월 공식 출범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기존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공연예술재단을 폐지하고 두 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해 운영된다고 한다.

그동안 광주문진위는 예술 진흥보다는 기금 배부 창구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연예술재단 역시 문화가 및 전문성의 결여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견인할 정책적 기능이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재단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와 인적 구성 등 해결해야 할 현안 또한 만만치 않다. 현재 두 단체의 통합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고작 50억원에 불과하다. 거대한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 기금 목표를 500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열악한 광주시 재정 탓에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인적 구성 역시 모두 25명으로 잡혀져 있지만 조직이 그만큼 비대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서 벌써부터 특정한 내정설까지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재태로’ 된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선택되지 않으면 공연예술재단처럼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문화재단이 걸출한 결과적으로 주민의 혈세만 축낼 뿐이다.

간부가 여기자 성추행, 경찰 제 정신인가

요즘 경찰을 보면 제 정신인지 의구심이 든다. 경찰 간부라는 사람이 비상근무 시간에 술을 먹고, 그것도 모자라 취재중인 여기자를 성 추행까지 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하는 말이다.

광주동부경찰서 조모 형사과장은 을지훈련 기간인 지난 16일 밤 형사과 사무실에 술이 취해 들어와 사건 취재를 하고 있던 여기자를 강제로 껴안는 등 한동안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당시 사무실에는 당직 경찰이 5명이나 근무하고 있었으나 누구 하나 조 과장의 성추행 행위를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았다.

이런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해당 경찰의 엄중 처벌은 물론 지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근무시간을 다 잡아 조직을 일대 혁신하고 추스를 수 있는 근본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경찰은 민생 치안력 부재는 제쳐놓고라도 최근 연이어 터진 ‘외의구 고문’, ‘보고 누락’, ‘능장 보고’, ‘항명 파동’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다.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조직기강을 다잡아도 모자랄 판에 경찰 간부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경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경찰의 이 같은 난맥상은 풀릴 대로 풀릴 북부기강이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경찰 조직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극약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해당 경찰의 엄중 처벌은 물론 지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근무시간을 다 잡아 조직을 일대 혁신하고 추스를 수 있는 근본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118조 빛더미’ LH

1000억 성과급 잔치

총 채무 118조원에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 위기로 비상경계체제에 돌입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직원 성과급으로 1000억여원을 책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정부의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공기업에 차등 지급되는 급여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직원들에게 지급될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1063억여원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940억여원은 상반기에 이미 지급했다. 이는 LH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440%의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직원 한명당 평균 지급액은 1600만원에 달한다.

LH는 또 인원 조정을 이유로 직원 250명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교육비용은 인당 적게는 770만원에서 많게는 7800만원까지 모두 62

억원에 이른다. LH는 지난해 제정 위기 극복을 위해 2012년까지 전체 인력 6923명을 56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인원은 6745명으로 178명이 줄어 당초 감축 목표 인원의 13.4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LH 이치승 사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자회견을 찾아 “민간기업처럼 초과이익 가운데 일부를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급여의 일부”라고 해명했다.

공기업 성과급은 급여의 일부를 미리 재원으로 떼어내 경영평가를 한 뒤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정한 지급률에 따라 주는데 LH는 지난해 C등급(280%)을 받아 666억원을 나눠줬고, 올해는 A등급(440%)으로 올라가 1062억원을 배정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이 상여금조차 사려깊게 모두 반납하면 좋겠지만 이미 지난해 모든 임직원 임금이 급여 3~5%를 반납했고, 13개 공기업 중 급여가 가장 낮은 상태로 직원들도 생활인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광주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 for the newspaper.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do.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man with a large head and a speech bubble, and the text '어찌될지 걱정(?)스럽다' (I'm worried (?) about what will happen).